

## 광주商議 선거 법정다툼 두달째

# 지역경제 현안 수두룩한데 판결후도 재선거 시비일듯

두달 넘게 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직무대행 전도영 변호사)의 '파행'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국내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상회의의 '파행'을 지켜보는 광주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결립들은 무엇인가  
 금호측이 19대 회장선거와 관련, 광주상의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지난 5월 광주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진 데 이어 본안소송(의원선거 및 임원선출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무효로 판단될 경우 직무대행은 새로운 상공의원 총회를 구성해 회장 재선거를 치르기로 돼 있다.

그런데 금호측은 현행 정관상 선거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재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부정 시비가 또 벌어질 개연성이 크므로 차제에 광주상의 정관중 선거과정에서 논란을 빚는 피선거권 제한, 선거인명부 열람제한, 부적절한 위임투표 등 '독소조항'을 개정할 뒤 상공의원(42명)을 뽑자는 주장이

다. 법원 판결 후에도 현행 정관대로 재선거를 하느냐, 아예 정관을 고쳐 재선거를 하느냐는 큰 진통이 남아있는 셈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 전도영 직무대행은 취임직후 "마형렬 회장과 금호측의 합의를 도출해 합리적인 정관 개정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쪽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정관 개정은 물건너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금호측은 "조기 재선거보다 불합리한 선거규정의 개정과 개혁적인 선거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마 회장측은 "임원선거 관리규정은 법리 해석의 문제일 뿐으로, 광주상의의 조속한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행은 "상의법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회원규정이 당연회원에서 임의회원으로 전환될 경우 회비납부액이 현저히 줄어들고 회원들도 다른 경제단체로 빠져나가 광주상의의 급격한 위상추락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비해서라도

광주상의 사태 주요 일지	
3월 6일	- 19대 광주상의 상공의원 선거
3월 13일	- 19대 광주상의 회장 선거, 마형렬 회장 당선, 금호측, 선거무효주장 상의선거 관리위원 역류사태, 위임 투표환 광주지법에 증거보전신청
3월 27일	- 금호측, 광주지법에 '상의 의원 선거 및 임원선출 무효확인 청구소송제기'
3월 28일	- 금호측, 광주지법에 상의 회장 단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제기
5월 2일	- 광주지법, 상의 회장단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5월 11일	- 전도영 회장 직무대행 취임

양쪽의 전향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듭날 모색은  
 한 회원은 "기아차의 부분과업 물입, 삼성광주전자의 수출 적자, 고유가 등 경제현안이 산적해있는데 광주상의가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권위있는 기관이나 지원로가 중재에 나서 이번 사태를 조기 수습해야 광주상의가 더 이상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일부 회원들이 "광주상의가 마회장과 금호만의 소유물이나"며 '회원 발의'를 통해 정관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 중부 '물폭탄'...서울·경기·강원 물에 잠겼다



16일 강원도 평창에 내린 기습폭우로 평창군 방림면 구포지구 일대 도로와 농경지, 가옥 등이 모두 침수된채 물바다로 변했다. /연합뉴스

# '물폭탄' 남하...호남 집중호우 '비상'

## 광주·전남 오늘 최고 250mm 예상

15일부터 서울·경기·강원 등 중부권을 휩쓴 폭우로 12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되는 등 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농경지와 도로·철도가 침수되고 주요 댐과 하천이 범람 위기에 처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관련기사 3면>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16일 오전 30분을 기해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했으며, 정부는 집중호우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을 조기에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부권 피해=16일 오후 현재 경기·강원지역에서 모두 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로유실도 잇따라 국도는 총 10개 노선 59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물에 잠겼다.

김포공항과 지방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와 청주~제주를 왕복하는 총 25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

하천과 댐의 범람 위험으로 인해 주민들의 대피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영월지역은 동강과 서강의 하천 수위가 높아지자 8천여명이 주민들

250mm 이상인 곳도 있었다"고 16일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처럼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많은 비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장맛비는 18일까지 계속된다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관계기관 비상=전남도 재난대응 감수량은 80~160mm, 많은 곳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또 각 시·군에도 비상근무에 돌입하라고 지시하고, 범람할 가능성이 있는 하천의 다리에는 '세이프 라인'(Safe Line)을 설치,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는 16일 오후 1시부터 등산객들의 입산을 전면 통제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北, 전면 거부

# '北 미사일' 혼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 오후 (현지시간·한국시각 16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재차 촉구했으나,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거부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임을 밝혀 한 발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

및 중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조정, 핵심 쟁점인 '유엔 헌장 7장에 따라'라는 부분을 삭제한 결의안을 상정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15-0)로 통과시켰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 10일만이다.

결의에서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 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특정학원·특수교육·특수교육  
**남부대학교**  
 http://www.namj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062-970-0207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jchunnam.ac.kr  
 ▶ 상담전화 062-951-1111 / 062-951-5000

물가 36년 정보의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線 物 價 情 報  
 http://www.kpi.or.kr  
 韓國물가정보  
 TEL: 977-7300 FAX: 977-4884

30대여성  
**80%** 피부미용 전문가  
 이젠만큼은 후회없이  
**딤화이트닝**  
 IOPE